광전매일신문

유디철강(주) 철근공장 기계가공 철근 · 철강재 도 · 소매
유디기업(주) 장애인 편의시설 설계 및 시공 BF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설계
대표이사 신 현 종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8번로 14-9(연산동 1280)
TEL : 062-942-7577 FAX : 062-942-7576
MOBILE : 010-2645-5325 E-MAIL : ud7577@naver.com

대표전화 062-525-9775 gjnews.kr FAX : 062-528-4566 2025년 7월 28일 월요일

광주 쓰레기매립장, 20년 만에 친환경에너지 단지로

2004년 중단 광역위생매립장에 태양광시설 건립
법적다툼·대한상사중재원 소송 종료… 내년 첫 삽
시간당 18.59MW 전기 생산… 6200가구 하루 사용량

광주 북구 운정동 태양광발전시설 평면도. 사진=광주시청 제공

광주 운정동 광역위생매립장이 사용 중단 이후 20여년 만에, 조성계획 10년 만에 혐오시설에서 친환경에너지 단지로 바뀌어 지역민들에게 120억원의 이익을 안길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북구 운정동 광역위생매립장에 계획된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이 법적 다툼과 대한상사중재원 사용료 배분 소송이 해소됨에 따라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내년 초 착공해 2027~2028년부터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악취 등으로 인해 혐오시설로 인식됐던 광역위생매립장이 지난 2004년 사용 중단 이후 20여년 만에, 조성계획 수립 후 10여년 만에 지역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운정동 광역위생매립장은 양과동 위생매립장 조성 전까지 광주지역의 생활쓰레기가 매립돼 인근의 주민들은 악취에 시달렸다.

사용 중단을 결정한 광주시는 지난 2015년 11월 방치돼 있던 부지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설립계획을 세우고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했지만 컨소시엄 업체가 부정당 업자라는 사실이 확인돼 사업자 지정을 취소했다.

선정된 업체는 2016년 2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2020년 4월 대법원이 광주시의 손을 들어줄 때까지 4년간의 법적다툼으로 인해 첫 삽 조차 뜨지 못했다.

광주시는 우선 순위 선정업체를 취소하고 후순위 업체를 사업자로 지정했다. 하지만 후순위 사업자도 지난 2023년 7월 20년동안 조성해야 하는 지역발전기금 120억원이 많다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고 8개월여 만에 광주시의 승소로 종료됐다.

현재 사업자는 220억원을 투입해 광역위생매립장 27만㎡(8만평) 부지에 시간당 18.59M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운정동 태양광발전시설은 광주지역 최대 규모이며 한시간 생산량은 광주지역 6200가구가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사업자는 생산된 전기를 12개의 기업과 한전 등에게 제공할 계획이며 매년 지역발전기금 6억원 이상을 조성한다.

광주시는 조성된 기금을 태양광발전시설 인근의 5개 마을(470여가구) 발전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운정동 태양광발전시설이 건립되면 광주 최대 규모이며 전기 생산량도 많아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해 도심과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미래 에너지 자립계획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도일 기자

광주·전남 온열질환 189명 가축 폐사 피해 규모 20억원

광주·전남에서 35도 안팎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질환자가 18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폭염에 따른 가축 폐사 피해 규모도 20억대로 불어났다.

25일 광주기상청 등에 따르면 이날 낮 최고기온은 광주 조선대·장성 36.7도, 담양 봉산 36.2도, 무안 무안공항 36도, 광양 광양읍·곡성 35.8도, 함평 35.7도, 함평 월야 35.3도, 해남 산이·화순·영광 35.2도 등이다.

현재 광주와 전남 전역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다.

연일 이어지는 불볕더위에 온열질환자와 가축 폐사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 5월15일부터 전날까지 지역 내 온열질환자는 189명(광주38·전남 151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감시체계 공식 기록 기준으로는 사망자가 현재까지 없다. 지역에서도 온열질환에 의한 사망 의심 사례는 있었으나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아 공식 집계에서는 빠졌다.

가축 폐사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전남 20개 시·군 농가 279곳에서는 폭염으로 가축 15만8789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피해액 규모만 20억3500만원으로 추산된다.

종류 별로는 닭이 14만3471마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오리 8170마리, 돼지 7148마리 순이었다.

현재까지 고수온에 따른 양식 어류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며 "가축 집단 폐사 가능성도 있으니 사육 밀도를 낮추고 송풍장치나 축사 내부 분무장치를 가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승원 기자

물놀이 즐기는 피서객들 26일 오후 전남 화순 동가리 계곡에서 가족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뉴시스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법적 적립 비율 준수 '3년째 미충족'

작년 법적 기준 187억 중 100억 적립 그쳐
올해는 190억3500만원 중 90억원만 적립
"일상화된 재난 대비 제도, 의미 퇴색 우려"

'426㎜' 괴물 폭우와 같은 재난의 일상화가 우려되는 상황에 광주시가 지난 3년 동안 재난 대비 차원에서 모아야 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적 적립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광주시의 재난관리기금 부족분이 100억원가량 발생했다. 시의 올해 재난관리기금 법적 적립 기준치는 190억3500만원이었지만 90억 원만 적립한 것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운용되는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 응급 복구를 위한 사업에 활용되는 재원이다. 매년 지자체의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 100분의 1을 최저 적립액으로 적립해야 하는 의무 기금이다.

이에 지자체는 일반 회계에서 의무적으로 예산의 일정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해야 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예산 부족을 이유로 본예산 편성 시 관련 기금을 과소 편성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광주시의 재난관리기금 법적 적립 비율 미준수는 최근 3년 동안 반복되고 있다.

지난 2023년 광주시의 재난관리기금 법적 적립 기준치는 171억원이었지만 100억원만 본예산 편성 후 추경에서 추가 편성하지 않아 부족분 71억원이 발생한 바 있다. 2024년에도 187억원을 적립해야 했지만 본예산 편성액 100억원만 적립, 추가 증액하지 않아 부족분 87억원이 발생했다.

광주시가 현재 운용 중인 재난관리기금 액수는 이날 기준 총 658억2800만원이다. 시는 당장 활용에 대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재난관리기금 적립 비율 준수 의무는 시의회에서도 당부된 바 있다. 시의회는 지난달 13일 2024년 예산결산안을 심사한 후 재정건전성 강화를 요구하면서 재난관리기금 법적 적립 비율 준수 등을 주문했다.

시민단체들은 광주시가 일상화된 재난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지자체는 이번 폭우와 같은 일상화된 기후 재난에 언제든 대비해야 하지만 법적으로 요구되는 최소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재난 대응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행정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익 참여자치21 공동대표도 "피해를 입은 자치구 중 특별재난구역에 들지 않는 곳이 있을 경우 시의 재난관리기금에 도움을 호소하는 곳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만일을 위해 법적으로 채워 놓아야 하는 곳간을 일부 비워 놓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지자체는 재난지역 선포를 떠나 언제든 도울 여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일상화된 재난 대비 제도의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없도록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폭우로 집계된 광주지역 피해액은 전날 기준 약 501억원으로 잠정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동구 77억원, 서구 77억원, 남구 26억원, 북구 235억원, 광산구 86억원이다. /전광춘 기자